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코로나19 추경예산 40兆 필요”

긴급 간담회 갖고 증액 강조
산업계 피해 전대미문 상황
추경 규모 전향적 확대 필요
국회 찾아가 설득할 용의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9일 오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11조7000억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서 11조7000억원에 대한 추경 규모를 심사하고 있는데 추경 규모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적게는 0.3%포인트, 많게는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며 “현재 예산안인 11조7000억원으로는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의 영향만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을 1.0%포인트 끌어올리려면 추경 예산을 최대 40조원까지는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로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며 “피해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추경을 대폭 확대해 코로나19로 침체되고 있는 경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원활한 금융 부분의 지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 현장에서 정부의 지원대

책 효과가 제대로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특히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돈을 지원받도록 금융지원 파이프라인이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추경재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원활히 지원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앞장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의 분배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기에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선 금융기관이 (부실을 우려해 정책 금융) 대출 등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정부, 한국은행이 나서서 (금융 지원) 파이프라인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추경규모 확대를 위해 국회를 다시 찾아가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코로나 추경을 위해 아직까지 국회를 찾아가거나 추가 논의를 전달하지는 않았다”며 “추경 확대가 여의치 않으면 국회를 찾아가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수 기자 ysw@metroseoul.co.kr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2022년까지 고용률 68%로 끌어올릴 것”

일자리위원회 회의

작년 고용률보다 1.2%p 높은 수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고용률을 6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용기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 취임 이후 첫 회의다.

일자리위는 ‘50+50 추진 전략’이라는 이름의 후반기 일자리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기준 고용률을 68.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작년 고용률(66.8%)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고용률은 66.1%였다. 현 정부 전반기에 해당하는 작년까지 0.7%포인트 올랐다.

일자리위는 2022년까지 청년(15~29세) 고용률은 45.0%로, 여성(15~64세) 고용률은 59.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청년과 여성 고용률은 각

각 43.5%, 57.8%였다.

일자리위는 현 정부 후반기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박차를 가해 지난해 1367만명인 가입자를 2022년에는 150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로 2018년 19% 수준으로 떨어진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2022년에는 16%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도 계속 추진해 지난해 1천957시간인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을 2022년에는 1천800시간대로 떨어뜨릴 방침이다.

일자리위가 이날 내놓은 50+50 추진 전략은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0개 일자리 과제를 포함한 신규·보강 핵심 과제 50개와 기존 과제 50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일자리위는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공공 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 부진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했다.

/한용수 기자 hys@

농어촌도 4차혁명... 스마트빌리지에 80억

과기정통부 보급·확산사업 공모
4개 컨소시엄 선정, 4월9일 마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착수지구’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공모한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생산성향상·안전강화·생활편의 서비스를 보급 및 확산하는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다.

올해는 4개 컨소시엄에 80억원을 지원하며, ‘확산서비스’, ‘신규서비스’ 및

지역 ‘특화서비스’를 지역별로 5개씩 선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강원도와 무안군에 40억원을 지원해 ‘ICT 융합기반 축우관리’, ‘드론 기반 정밀 농업’, ‘태양광 안내판 지역정보’, ‘지능형 영상보안관’,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및 ‘스마트 쓰레기통’ 등 10개의 서비스를 개발·보급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설명회 개최가 어려워 비대면 중심 활동을 강화해 참여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의 지역 현안 해결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대응되는 기업의 보유기술 및 솔루션을 파악해 참여 희망 지자체와 기업의 매칭을 지원한

다. 또 사업 공모 및 제안서 작성 관련 Q&A를 배포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모 참여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4월 9일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제출하면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확대 발굴해 실증할 뿐 아니라, 성과가 도출된 서비스는 향후 대규모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에 많은 컨소시엄이 참여해 다양하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안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지원참여 中企 모집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과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두 유형으로 우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중기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지난 2018년부터 함께 진행해온 것으로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5년간 삼성전자와 정부가 각각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유형별로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

기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위기관리지역 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은 참여시 우대해 선정한다.

아울러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보험료 인하 ▲휴먼쇼핑·수출상담회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후속 연계사업도 탄탄해 200명 규모의 삼성전자 현직 제조 전문가들의 제조 현장 혁신활동 멘토링을 통해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면

서 “또 판로개척을 위한 스마트비즈니스포 참가, 홍보를 위한 아리랑TV 영상제작, 연구개발(R&D)을 위한 특허 개방 등의 다양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사태 극복을 위해 마스크 제조기업이 신청할 경우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기중앙회가 중기부와 함께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에 공통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원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신규 구축은 최대 1억원, 고도화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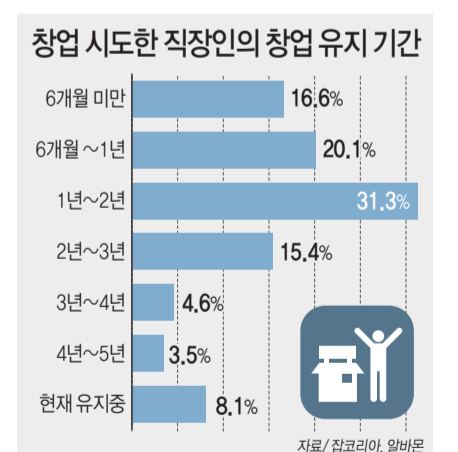
직장인 20% “창업 시도” 했지만 10명 중 7명 “2년도 안돼 문 닫아”

연령별로는 30대 창업자 가장 많아

직장인 5명 중 1명은 과거 창업을 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창업자 중 절반 이상은 2년을 채 버티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성인 남녀 직장인 13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9.2%는 ‘과거 창업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학생 때 창업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이보다 적은 13.6%였다. 연령대별로 30대(25.8%) 창업자가 가장 많았고, 40대이상(24.3%), 20대(12.5%) 순이었다. 성별로 남성(20.8%)이 여성(17.8%)보다 소폭 높았다.

창업을 했던 이유(복수응답)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51.0%)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다. 이어 ‘꿈꿔왔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37.5%), ‘취업이 어려워’(18.5%),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13.1%), ‘시간,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일하고 싶어서’(10.1%), ‘정년 없이 오래 일하기 위해’(8.1%), ‘취업에 도움이 될 경험을 쌓기 위해’(8.1%), ‘너무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



해서’(6.9%), ‘조직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서’(4.2%) 등이었다.

창업 기간은 길지 않았다. 창업 유지 기간을 물었더니 ‘현재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답변은 8.1%에 그쳤다. 창업 경험자 중 가장 많은 31.3%는 ‘1년~2년 미만까지 창업을 유지했다’고 답했다. 또 ‘6개월~1년 미만’(20.1%), ‘6개월 미만’(16.6%) 등 전체 68%는 창업 2년을 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 창업 기간이 채 1년에 미치지 못한 응답자도 36.7%에 달했다. 3년 이상 창업을 유지한 응답자는 8.5%였다. /한용수 기자